

기본소득이 과학에 묻다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어떤 식으로든 교류를 해보자.” 이야기를 꺼낸 지는 벌써 오래다. 잊고 지내다시피 했는데, 과학 책방 갈다(대표 이명현)에서 연락이 온다. 묵은 과제를 털어서 좋고, 문송으로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과 ‘알못’으로서 경외의 마음도 없지 않아 일단 맞장구부터 친다. 알고 보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의 ‘2021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과학과 기본소득의 대화를 주제로 갈다가 신청한 것이 채택된 것이다.

과학책방 갈다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다. 과학(저)자들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많은 과학(저)자들이 갈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저)자들은 왜 모이고,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갈다의 누리집을 검색한다. ‘갈다GalDar’라는 이름은 갈릴레이Galilei와 다윈Darwin의 첫 자를 딴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말 ‘갈다’라는 동사를 통해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밝히고 있다.

먼저 ‘Galilei + Darwin’의 합성어가 지니는 의미이다.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저자(저술가)’ 집단이다. 과학자이자 저자로서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첫째 Cultivating (과학문화의 발을 경작하다), 둘째 Sharpening (과학의 edge를 만들다), 셋째 Grinding (딱딱한 과학을 부드럽게) 넷째 Disrupting (지식의 판을 교체하다)이다.

과학탐구와 저술을 통한 공유, 과학문화를 경작하고 버리고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잘 갈아서 전달함으로써 기성질서를 균열·전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갈다가 지향하는 일이다. 사실facts 탐구로 자신의 책무를 한정함으로써 유식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무반성적이라는 과학(자)에 대한 향간의 선입견과는 거리가 있다. 과학계의 아방가르드라고나 할까?

아무튼 이런 곳에서 공동작업을 제안했으니,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잘 알려진 대로 근대는 분열의 시대이다. 분업(경제, 사회)과 분권(정치)에 기반하여 학문도 분과학

문화(=과학화)한다. 근대의 이상은 사회의 제반 영역들이 각자의 논리와 목적에 맞는 최고의 합리성에 따라 조직·운영되는 데 있다(하버마스). 분열은 영역들 간에서도 영역 내에서 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학문은 사실 탐구와 의미 탐구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주로 자연과학이, 후자에는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이 해당한다. 이 분열은 희극이자 비극이다.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라고 한다. 이를 차용하자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의미탐구는 공허하며 의미연관을 상실한 사실탐구는 맹목이다(Believings without Seings are empty, Seings without Believings are blind.” 사실과 의미는 불가분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가 분리된, 웃픈 현실에서 살고 있다. 진실^{truth}은 없고 자기 진실성^{self-truthfulness}만 있다(태극기 부대를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의미의 통합은 오늘날 이념(당위; Sollen)이지 현실(존재; Sein)이 아니다. 사실과 의미의 분리 이후 양자의 통합은 과제가 된다. 기본소득과 과학의 만남 기획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양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니 통합은 언감생심이고 양자의 공유지점이 과연 있는지, 없다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획을 진행한다. 갈다 측에서는 이명현 대표(천문학)와 이미영 매니저(산업공학, 정보사회학)가 기본소득 진영에서는 이관형(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철학/미학), 윤형중(전 한겨레신문 IT담당기자, 산업공학)이 기획에 참여한다. 윤형중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갈다에서도 일한 ‘배트’맨이다.

양자 간 대화 프로그램의 제목은 <기본소득이 과학에게 묻다>로 정한다. 2021년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폐쇄 유튜브로 중계된다. 1차는 녹화로, 2차는 줌 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1차는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과 정지훈(DGIST 겸직교수, 의사, 의공학자, IT저술가)이 발표자로 나선다. 2차는 전중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진화심리학)이 발표자로 송민령(뇌과학자)은 준(sub) 발표자(?)로 참여한다. 두 차례 모두 사회는 이명현이, 패널은 이관형, 윤형중이 맡는다.

1차 토론회 발표자인 금민과 정지훈은 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공히 ‘디지털 전환’으로 본다. 금민은 자신의 글 “인공지능시대 인간의 노동”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특유의 정연한 논리로 풀어낸다.



다. 그는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아울러 문제를 해결할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문제란 인공지

능의 목표와 인간의 관심사와의 불합치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의 목표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통제의 문제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차원, 즉 인공지능과 자본주의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민은 인공지능이 자본의 인공지능이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최종목표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공지능이 편향bias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이런 편향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목적 내지 목표를 추구하도록 방임하는 대신에 사회적으로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유익한 인공지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탈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인 플랫폼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현실에 주목한다. 데이터는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 기록물이며 플랫폼은 데이터의 추출기구이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계급적 배치는 플랫폼 소유를 기준으로 1차 분할되며, 개별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준으로 2차 분할된다. 플랫폼 자본은 사회적 삶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여기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역사상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현실 진단 위에 그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전환의 이중적 전환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중적 전환의 목표를 혁신적 과학기술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이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본다.

그는 사회적 전환과 관련하여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재구성 필요성을 제기한다. 디지털 전환은 국가 간, 기업 간, 사회구성원 간 대격차를 야기한다. 국가 간 격차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 투자와 사회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공공투자는



반드시 지분획득과 연결시키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지분 수익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의 형식으로 배당한다면 디지털 전환의 역진적 성격은 완화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며, 재원은 조세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공공투자의 확대로 수익이 전 국민에게 배당되는 공유 지분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그 원인인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노동이 혹은 삶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룰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짓는다.

정지훈은 “IT기술의 진화와 기본소득”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의미’보다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IT기술의 진화과정을 ‘사실’에 충실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인에게 보편기본소득을 전달하려는 일군의 시도들이 있음을 알린다.

기존의 기본소득운동은 각급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비정부기구에 의한 사회실험이 다수 있었으나 말 그대로 실험이었기 때문에 규모도 적고 실험 기간 이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없었다. 정부기구를 배제하고 민간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 전지구인에게 지급함을 목표로 삼는, 보편기본소득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강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IT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그는 IT기술의 발전이 크게 20년 주기로 변화했음을 지적한다.

첫 번째 사이클은 “PC, 윈도우, 인터넷”이 주도한다. 1974년 PC가 출현하고 198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다. 1990년대 중반 월드 와이드 웹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1995년 MS의 윈 95가 출현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2007년경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이 보급된다. 즉 1980년대 후반 PC 보급부터, 200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까지의 시기이다. 소위 ‘윈텔(MS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PC의 칩을 공급하는 인텔의 합성어)’제국의 시대로서 종이가 없어지고 사무환경이 급속히 변화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인 기업과 아닌 기업 간에 의사결정 구조와 속도가 달려져서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변화를 ‘지식혁명’으로 규정한, 빌 게이츠의 책 『생각의 속도』가 대유행한다. 1차 사이클은 주로 기업의 변화가 핵심이다. 산업의 주도권이 전통적인 제조업, 에너지솔루션, 금융 등에서 윈텔과 같은 기업으로 넘어간다. 이 시기 후반에 구글, 네이버 등이 출현한다.

두 번째 사이클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모바일’이 주도한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고 2012년 1억 대가 보급된다. 무선이 핵심이며 1인 1핸드폰 시대로서 1차 사이클과는 달리 ‘개인(삶의 변화)’이 변화의 중심이다. 무선 커넥션에 기반하여 개인들이 미디어의 생산, 유통, 소비의 주체가 된다. 애플, 구글(첫 번째 사이클 당시에도 기존하던 기업이었으나), 퀄컴(인텔 꺾음, 오픈 소스기반이라 오래가지는 못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이 부상하며,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짓히고 카카오가 올라서는 시기다.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서 향후 5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사이클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은 먼저 하드웨어가 보급되고 이에 기반하여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뒤따르는 방식이었다. 반면 세 번째 사이클은 그 양상이 다르다. 사용자가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는 유저 이노베이션이 가장



느린 것인데, 이게 먼저 일어나고 있다. 아직 관련 하드웨어가 보급되지도 않았는데, 발전이 되고 있다. 정상적 시작은 2025, 2030년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진화의 속도가 기존의 20년 주기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의 시대라는 특징을 지닌다. 코로나 19 이후 가장 중요한 10대 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챗봇, VR/AR(메타버스), 3D프린팅, 드론, 로봇, 비디오 컨퍼런싱, 소셜미디어, 5G”이다.

IT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의 정책집행은 어려움에 처한다. 산업별 효율화, 최적화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서, 일괄적인 산업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대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ESG에 대한 관심 고조는 기업의 가치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한성장에서 지속가능성과 혁신으로, 이익 최고의 가치에서 이익과 삶의 질, 사회적 안녕의 균형으로, 기술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술 수용의 중요성 증대로, 소유에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제어에서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으로 변화 요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가치관적 변화에 따라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보편기본소득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Hedge for Humanity를 표방하는 Manna 프로젝트와 Proof of Humanity의 The Internet of Humans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증명’(이것을 조건 부여라고, 즉 무조건성 위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자 모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크립토크런시(가상화폐)에만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기술 자체의 목적이 왜곡된 측면이 크다. NFT(대체 불가 토큰) 기반의 창조경제에서는 모두가 디지털 창조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너무 크다.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되나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항기술로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기술이며, 중앙집중화 없이 사용자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나 정부기구에 의한 기본소득 지급은 정치적 합의 문제가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기본소득 지급은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있다. 정부의 참여 없이 민간의 거대한 협동조합을 가능케 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가려는, 일종의 디지털 좌파(?)운동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문에서 기본소득을 이루려는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한, 아래로부터의 기본소득 실현 움직임이 쌍끌이로 진행되는 것은 나쁜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

2차 토론은 인간의 본성과 기본소득의 실현방안을 다룬다. 1차 토론이 우리를 둘러싼 ‘외부’ 조건(IT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변화에 방점이 놓여 있었다면, 2차 토론은 우리 자신의 ‘내부’ 조건(진화 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 본 인간)에 초점을 맞춘다.

전중환은 “보편기본소득과 보편인간본성”을 발표한다. 인간이 침팬지와 분화한 것이 대략 5백만 년 전이라 할 때, 인간은 499만 년 동안 수렵·채집 생활을 한다. 정주를 의미하는 농업사회의 출현은 약



보편 기본소득과 보편 인간본성

과학책방 갈다 특별기획 (2021/11/12)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국제캠퍼스)

전중환 교수

1만 년 전이다. 인간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면 농업과 목축은 12월 31일 오전 6시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오후 3시경에 도시가 성립하며 산업화는 밤 11시 40분경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진화는 여전히 수렵·채집 생활 당시에 맞춰져 있다.

전중환은 인간의 진화 결과가 편견 혹은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Folk Economic Beliefs)’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거대한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을 직접 체험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늘날 일반인들은 전해들은 말, 그리고 자신이 상상한 바에 기대어 경제현상에 대한 믿음을 지닌다. 민간경제학적 믿음을 경제학 이론으로부터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심리적 적응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현대인은 어떤 쟁점의 발생 시에 아직도 수렵·채집 시절 유리했던 행동을 선택하며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이 그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선택된 행동들은 우선 ‘직접상호성’의 특징을 지닌다. 그 예로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고, 그 급부로서 때밀이를 받는 것을 든다. 목욕탕의 두 사람은 상대의 때를 밀어주는 행위로 인한 수고보다 때밀이를 받을 때 얻는 이득이 높다고 여기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합의를 어기는 사람, 즉 ‘직접상호성’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겪으면서 인간은 ‘사기꾼 탐지’를 본성으로 장착한다. 복지정책에서 현대인은 ‘본능적으로’ 수혜자의 ‘자격’을 따진다. 수혜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가린다는 것이다. 즉 수혜자가 ‘불운한 개미’인지, 아니면 ‘게으른 벼지이’인지를 가린다고 한다.

복지학과 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에서 말하는 보편복지가 선별복지보다 부의 재분배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에 따라 선별복지에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경제학적 무지나 인지적 편향에 의한 것만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오랜 채집·수렵시대에서 비롯한 진화의 결과이다.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재정 소요가 너무 크다는) 감당 불가능성’, ‘노동기피의 위험성’, ‘(상호직접성에 위배되게도) 소수가 다수를 부양’한다는 오해를 만들어 낸다. “먼 과거의 소규모 사회에서 사회적 믿음을 담당했던 심리적 적응이 현대의 경제학적 이슈들에 대한 일반인의 믿음을 만든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기본소득은 이러한 인간의 진화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공감을 끌어내야 할 과제를 지게 된다고 한다.

송민령은 “인지역량이 잘 발휘되는 맥락”이라는 짧은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이 인지역량의 발휘 및 증진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먼저 같은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 가난한 사람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통제를 해야 할 것이 많다. 이런 통제는 한계치가 있으며 과도한 자기통제는 인지능력을 떨어뜨린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뇌 사진을 통해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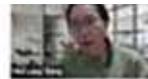
두 번째로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인지력을 저하시키는데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삶의 (경제적) 토대의 불안정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포기를 해버린다. 이것이 헝그리 정신의 실체라는 것이다. 헝그리 정신으로 도전하라는 것은 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빠른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인지역량 발휘와 관련하여 ‘우려에 대한 대비: 무엇이 보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인



인지 역량이 잘 발휘되는 욕망



1. 같은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
Mani A. et al. (2013) Poverty Impedes cognitive function. Science. (+ 내 경험)
Wohls KD (2015) The Poor's Poor Mental Power. Science
2.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기억력, 인지력 저하.
3. 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포기해 버림 (항그리 정신의 실체는??)
Wohls K. (2015) 내 무의미한 삶. 가난의 상상세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몰락.
4. 우려에 대한 대비: 무엇이 보상인가.
돈으로 리전 올리려 치다, 맥신도 알지X. 다른 길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줄 수.
e.g. YOLO. 사일링과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저지르기. 살아있는 사건이 생김
5. 새로운 도전과 위험추구
exploration vs exploitation. 경험되면 도전이 어렵다. MB 이후 철학을 추구. 실력의 재기 가능성
6. 궁극 수렴과 결핍의 가능성

간은 돈 이외에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저지를 수 있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돈벌이에 급급하다면 재미 있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다섯 번째로 인지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과 위험 추구는 중요하다. 그런데 근래 들어 ‘철 밥통’만을 추구한다. 실패하면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 고정수입과 계획의 가능성이 인지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

뇌과학의 연구성과들은 인간이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성적’임을 말해준다. 다른 동물보다 조금 ‘이성적’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감성을 움직일 ‘비전’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본소득과는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소위 ‘히키코모리’화된 젊은이들이 많다.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게임 등에 몰두하는 삶의 사이클이 일단 내재화·생활방식화하면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30만이 넘는다고 한다. 기본소득을 주되,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근대는 분열의 시대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근대는 분열된 원자적 개인의 이기성, 욕구의 무한성을 기본전제로 한다. 욕구의 무한성은 재화의 희소성과 동전의 양면이다. 욕구가 무한하다면, 욕망의 충족수단인 재화는 희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적 성과인 진화심리학은 근대의 기본전

제에 대해 회의해 볼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이기적 유전자’는 삶의 환경에 적응하여 유전자를 보전·확산하려는 방향으로 인간이 진화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의 이기성’으로 오독된다. 유전자가 자기를 보전·확산하려는 한다는 차원에서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전자의 자기보전과 확산은 타자와의 상호성, 환경과의 조화·적응을 요한다. 이는 ‘인간’이 말 그대로 ‘관계’로서만 존재 가능함을 뜻한다. 다시 말하지만 유전자의 보전과 확산은 타자(다른 사람과 환경)와의 상생과 적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소 기계적인 분류이긴 하지만 의미의 영역인 기본소득과 사실의 영역인 과학의 첫 대화는 당초의 우려보다는 훨씬 크게 ‘통섭’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명현은 기본소득이 과학적 성과를 수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와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의 뇌 크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여러 과학적 사실들 가운데 하나일 뿐일 수 있다. ‘그게 뭘 대수야?’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가난이 심리적 불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신체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의 확인·확증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는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과학적 사실로부터 어떤 사회정책의 필연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다른 방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다른 방도도 필연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사회와 사회정책은 과학과는 달리 사실과 필연의 영역은 아니다. 사실과 의미, 진리와 가치 간의 상호 연관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실과 성과의 수용은 사회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대화가 이명현 대표의 바람이자 우리의 바람처럼 기본소득의 채택과 관련하여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럴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본다. 적어도 갈다의 과학자들과 연대할 수는 있을 것인가?